

서 평

#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전환과 조절이론적 비판

조철주

청주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조명래, 1999  
포스트포디즘과 현대사회 위기  
서울: 다락방, 404쪽, 18,000원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자본의 초이동성(hypermobility)과 탈조절화(deregulation)라는 두 개의 거대한 힘에 의하여 재단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사고, 행동, 생활 등을 규정하고 한정하는 틀이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최근의 지구적 차원의 전환을 일컬어 세계체제의 구조재편(global restructuring)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간된 조명래 교수의 저서 『포스트포디즘과 현대사회의 위기』는 독자로 하여금 정치경제구조의 세계사적 전환의 실체와 이것이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를 꿰뚫어 성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 무릇 우물

내부에서 우물을 관찰하면 우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정통 신고전주의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본주의 역동적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의 역동성에 대한 구조적 이해는 자본주의에 의하여 구획되는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 비판적 접근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자본주의 역동적 구조전환에 대한 이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에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사회집단과 개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포괄적 인식구조에 의하여 계급문제, 권력문제, 국가문제, 노동문제, 빈곤문제, 사회적 불평등,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에 관한 유의미한 탐색이 가능하다. 자본주의체제의 역동성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인간중심의 사회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고와 행동양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서는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볼 때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을 형성하고 있는 최근의 자본주의 전환을 비판적 관점에서 조절이론에 바탕을 두고 탐색하고 있다. 저자가 설명하고 있듯이(p.16) 조절이론은 맑시즘의 인식 틀 내에서 현실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려는 정치경제학 이론으로 맑시즘에 연결고리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정통 맑스적인 접근은 자본주의 재생산을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커니즘도 하위 체제간의 자동적, 기계적 상관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조절이론의 관점은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과 움직임, 위기의 발생조건, 그 성격, 또한 극복과정과 새로운 대안적 축적 체계의 등장 등과 관련된 일련의 축적 추동력의 전개는 추상적인 수준의 재생산 법칙이 일의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상황성, 구체성, 동태성의 조건에 매개되어 관찰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조절이론의 맑스적인 정치경제학 연구방법에 유연성을 불어넣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조절이론을 통하여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는 계몽주의 이래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던 근대사회 전반의 삶의 견고한 원리와 형식의 해체, 즉 ‘근대성(modernity)’의 해체에 이를만한 심

대한 변화가 20세기 마지막 4반세기 동안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회적 파편들은 모두 근대의 정형성을 거부하고 탈형식적이고 해체적인 것으로 변모해 가는 것임에 저자는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성의 해체는 다름 아닌 근대사회의 위기이다.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사회의 위기는 원초적으로 모순을 배태하고 있는 자본주의 축적활동을 안정된 사회적 관계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제도적 조절기제의 이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자본축적을 규정하는 노동관계, 소비관계, 국민경제의 재생산 구조 등이 기존의 사회제도적 장치에 의해서는 더 이상 조절될 수 없게 되면서 자본축적의 확대 재생산 순환이 파괴되고 근대사회 전반의 제도적 정합성이 무너지는 상황이 위기의 본질이다.

저자는 ‘포디즘(Fordism)’과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이란 개념으로 위기의 현상을 규명하려 시도하고 있다. 포스트포디즘은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안정된 조응구조를 바탕으로 고도의 자본주의 성장을 경험했던 전후 서구의 지배적 축적체제였던 포디즘이 1970년대에 들어서 위기를 겪게 되면서 출현한 새로운 축적체제이다. 포스트포디즘이 새로운 축적체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구화, 정보화, 탈산업화, 탈국가화 등으로 표현되는 축적양식과 사회적 조절양식에서의 전환, 그리고 이들이 사회화되면서 사회적 관계, 권력관계, 정체성의 변화, 기업관계의 변화, 소비양식의 변화, 문화양태의 변화 등 사회전반의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따라서 저자가 이 책에서 상정하는 포스트포디즘은 협의의 축적체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변화를 담는 광의의 축적체제 혹은 사회체제로 간주되고 있다.

본서는 총 2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5개의 장으로 구성되는 제1부는 ‘조절이론, 포스트포디즘, 탈근대성’이란 주제로 묶여져 있다. 이 책 전체를 관류하고 있는 이론적 관점인 조절이론에 대한 상세한 소개, 오늘날 자본주의의 지배적 축적체제로서 포스트포디즘에 대한 조절이론 관점에서의 조망, 그리고 지배적 축적체제의 교체에 따른 정치경제적 제 양상의 전환 즉, 탈근대성에 대한 규명 등이 제 1부의 내용이다. 한편 2개의 장으로 구성된 2부에서는 포스트포디즘이 지배적 축적체제로 확산되어감에

따라 수반되는 지구화, 국민국가의 해체, 그리고 이에 따른 축적체제의 모순이 한국경제의 위기로 현시되는 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각 장별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제1부 1장에서는 이 책의 주제인 ‘탈근대성과 위기’ 구조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그 전거가 되는 조절이론에 관해 조명하고 있다. 조절이론은 특정시대, 특정유형의 자본주의 경제, 즉 축적체제가 자본축적의 순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제도적 양상불이라 할 수 있는 조절양식이 결합되게 마련이라고 본다. 이러한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이들이 하향적, 미시적 수준으로 통합한 축에서 형성된 축적체제와 친화력을 갖는 ‘산업기술 패러다임’과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의 기본개념이 상향적, 거시적으로 통합된 축 위에 응축된 조절양식과 친화력을 갖는 ‘헤게모니구조’ 등이 조절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pp.40-46).

여기에서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간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함으로써 축적체제의 분과적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전후 지배적 축적체제인 포디즘은 해당 국의 사회구성체가 내장하고 있는 사회세력간의 역학관계, 제도적 양식, 축적전략, 국가성격 등에 의하여 그 구체적 형태와 내용이 다르게 형성됨이 발견된다. 즉 저자는 포디즘, 후기포디즘, 주변부포디즘, 후기주변부포디즘 등으로 포디즘 축적체제가 분과됨을 설명하고 있다.

조절이론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축적체제를 조절하는 사회적 조절양식과 그 메커니즘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절이론의 인식 차원에는 임금관계 등 미시적 조절에 관한 것과 사회적 헤게모니 구조 전반을 질서화 하는 거시사회적 조절에 관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절의 쟁점을 보는 수준과 관점에 따라 조절이론의 논의는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제1부 2장에서는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 축적체제가 이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의 추동력 유지를 작동의 원리로 하는 사회경제체제로서 노동-자본 간의 갈등을 내재적 기본 축으로 가치법칙의 모순이 항상적으로 점철되어 있으므로 해서 주기

적인 위기, 불연속, 단절을 겪으면서 이를 반경향적으로 극복해 가는 불완전한 과정들이 형태화된 것이다. 이러한 반경향적 불연속적 과정에서의 위기와 단절의 때 단계는 자본주의체제가 구조적으로 급격한 변동과 전환을 경험하는 재구조화(restructuring)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 축적체제로의 이행을 자본주의체제의 재구조화로 간주하고 포스트포디즘 축적체제가 형성화되는 조건과 이에 따른 다양한 양태, 포스트포디즘의 내적 다양성, 포디즘과 구별되는 포스트포디즘의 징표들, 유연적 축적체제로서의 포스트포디즘이 내포하는 기업관계, 노동관계, 산업조직 등에 있어서의 유연성에 대한 거시사회경제적 분석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pp. 66-79). 한편 공공정책 관련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포스트포디즘으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사회공간의 전환과 이에 따른 사회적 세력관계와 정치구조의 변화에 관한 논의이다(pp.80-99).

포스트포디즘의 공간, 즉 재구조화된 공간으로의 이행 과정과 그 메커니즘, 공간이행의 형성화로 나타난 신산업공간의 형성과 이에 수반하는 지역 간 불균형의 위계구조 등에 관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포디즘 축적체제의 경직성을 대체하는 유연성이 포스트포디즘의 생산관계는 물론 국가정책 전반에 스며들면서 포스트포디즘의 정치공간에서 사회적 헤게모니 구조, 정치구조, 국가역할, 국가정책의 지향 및 양태 등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비교적 간략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가역할의 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1부 3장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제1부 3장은 제2부 1장과 더불어 포디즘 축적체제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국가역할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 시점에서의 자본주의 축적체제는 항상 고유한 이데올로기를 갖는 국가개입양식과 결합하게 마련이다. 포디즘은 ‘복지국가체제(Keynesian Welfare National State: KWNS)’에 의하여 정의되는 조절제도로서의 국가역할과 결합하였다. 복지국가는 지난 1930년대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계획 및 재건의 이데올로기로 대두된 국가개입양식이었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자본주

의의 내부적 모순을 조절하는 규제양식이 복지국가체제이다. 포디즘 축적 체제에서 자본의 활동영역은 주로 한 주권국가 내부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자본축적의 조절기능, 즉 국가개입의 기제 역시 주권국가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을 띠는 것이 복지국가체제의 성격이었다. 국가경제, 국민국가, 국가시민, 국가사회간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조절장치였다.

자본의 초국적화와 초이동성이 실현되고 자본탈출과 유연성을 근간으로 하는 포스트포디즘이 새로운 축적양식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조절양식의 한 축을 형성하는 국가개입방식에도 구조적 변화가 왔다. 이제 주권국가 영역 내에 사회조절의 초점을 두는 복지국가체제의 사회제도와 개입방식은 그 이동영역이 범 지구적으로 확대된 자본의 축적과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복지국가를 대체하여 신자본주의 사고에 바탕을 둔 ‘생산적 복지 탈국가체제(Schumpeterian Workfare Postnational Regime: SWPR)’가 새로운 역할양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자는 생산적 복지 탈국가체제를 주권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슈페테리안 작업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 SWS)’로 대체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조절양식의 기본적 이념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경원시하고 대신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보수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 그런데 자본의 초이동성과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포스트포디즘 축적체제의 순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생산적 복지 탈국가체제의 개입방식은 신자본주의 이념인 강력한 시장, 최소국가,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복지국가 이념과는 달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국가의 영역에 속했던 많은 기능을 국제기구, 시장, 민간부문, 시민사회로 이양하고 국가가 담당하는 기능, 주로 경쟁과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감시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의 공동화(hollowing out of the state)’ 현상이 생산적 복지 탈국가체제의 특징이다.

국가의 공동화는 대체로 세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저자

는 이 책에서 이를 ‘국민국가의 이중적 해체’라고 규정하고 있다(pp.137). 중앙정부 기능의 국제기구로의 상향적 이양,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하향적 이양, 중앙 및 지방을 망라한 정부기능의 민간부문으로의 외부이양 등이 그것이다. 국가영역 및 역할의 축소는 지방분권화, 민영화, 규제완화, 외부조달 등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국가체제의 이와 같은 변화는 결국 공공영역의 축소, 시장 및 민간영역의 확대, 시민사회 역할의 증대 등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국가의 공동화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양태가 복지국가체제에서와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조절과정에서 국가가 차지하고 있던 독점적 역할과 지위가 무너지고 이제는 다양한 정부기관, 민간, 시장, 시민사회 등과 역할을 분담, 공유, 협력하는 양상으로 변모되고 있다. 즉 ‘통치에서 협치로의 변화(a shift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체제에서의 정부역할이었던 독점적 통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조직간에 형성되는 정책네트워크를 다변적으로 조율하는 네트워크적 관리의 역할로 변모하고 있다(p.134).

제2부 1장은 제1부 3장의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제1부 3장이 국민국가의 탈조절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제2부 1장은 국가의 탈조절화로 통칭되는 포스트포디즘 체제에서의 국가역할의 변모가 내포하는 모순과 위기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포스트포디즘 축적체제에 배태된 모순과 위기는 포스트포디즘의 확산이 몰고 온 지구화의 모순과 위기를 의미한다.

포스트포디즘의 등장 이후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어온 근대성의 해체가 집약되어 드러나는 국가의 탈조절화는 포스트포디즘의 작용이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 정치, 문화영역까지 침투되면서 사회전반이 국가의 사회제도로는 안정되게 조절될 수 없는 상태를 칭한다. 국가 조절양식의 약화는 시장영역과 초국경적인 부문이 국가의 조절범위를 넘어서 스스로 축적활동을 조절하는 현상, 즉 조절의 탈국가화 현상에 의하여 촉진된다. 포스트포디즘의 확산에 따라 축적체제를 더 이상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은 그 자체로써 지구화

시대 위기의 중요한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의 조건이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계에 형상화되어 나타난 것이 한국경제 위기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서가 된다. 이러한 관점은 신고전 정통 경제학의 관점과는 사뭇 다른 거시적 구조주의적 접근의 면모를 과시하는 대목이다.

제1부 4장은 지구화의 의미와 본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국제화, 세계화, 지구화 등 비슷한 용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저자는 이러한 용어들이 지니는 의미상의 차이와 상이한 이론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용어사용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pp.156-166).

지구화는 국가영역을 넘어서는 포스트포디즘의 확산과정의 맥락에서 이해된다. 오늘날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화는 초국경적인 기업거래에 의하여 초래되는 경제활동의 지구적 통합으로 특징지어 질 뿐만 아니라 지구상 여러 곳에서 전개되는 일상적 문화흐름들이 지구전체로 동시화되고 있는 현상(covariance)을 수반한다. 따라서 지구화는 근대를 넘어서는 인간 삶의 새로운 조건을 설정해 주는 지구적 문화의 출현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지구화의 진전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인간적 조건이 되는 지구성과 지구화를 촉진하는 물적 토대로서의 지구화 자본주의의 새로운 축적전략이 가져오는 결과, 즉 지구화의 결과는 어떠한 양상을 띄고 나타나는가? 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의 저자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pp.189-196).

지구화가 생활영역에 권력화되어 나타나는 모순에 대한 저항을 꺾어내고 행동화하는 사회운동, 즉 미시정치적의 활성화를 저지는 지구화의 결과가 인간적 조건으로 드러나는 면이라고 보고 있다(pp.190-192). 한편 이와는 달리 지구화의 결과가 갈등적이고 모순적으로 나타나는 면도 강조한다(pp.193-196). 즉 지구화를 위해 합쳐지는 힘이 장소화된 생활의 미시적인 의미를 해체하는 것이나 지구촌 형성과정에서 개별 국지공간들이 불평등하게 결합되는 현상을 갈등과 모순의 형상화로 보고 있다. 지구화가 새로운 인간 조건을 허용하면서도 그 내면에서는 국지화된 미세하고 고유한 의미들을 해체하거나 배제하는 과정을 동시화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제1부 5장은 거시적인 지구화의 수준에서 미시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으로 내려와 나타나고 있는 근대사회의 해체양상을 탈근대란 관점으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포스트포디즘의 축적체제 확산은 생산, 소비, 문화, 담론적 관계를 둘러싼 일상활동이 ‘공간적으로 압착’되는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포디즘 축적체제의 작동을 매개하는 정보, 금융, 권력의 지구적 흐름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간거리가 통합되거나 단축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공간은 일상활동이 전개되는 터전이자 영역이기 때문에 공간의 압착화는 공간 내부에서 설정되는 근대주체의 정체성, 일상관계, 권력관계에 심대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미시적 수준에서의 탈근대성이라 함은 바로 공간을 매개로 하여 정체성, 담론, 기호체계가 더욱 고도화되는 문화적 현상과 그 성질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2부 1장의 논점과 내용은 이미 앞의 제1부 3장의 포스트포디즘의 정치사회적 전환과 연관지어 설명한 바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제2부 2장은 1997년 말의 IMF관리체제로 표현되는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재성찰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한국경제 위기의 실체와 과정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틀과는 다른 관점의 분석이다. 신고전주의 정통 경제학의 관점이 아닌 조절이론의 맥락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에 따르면 한국경제 위기는 포스트포디즘 축적체제로의 전환, 국가체제의 탈조절화, 지구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축적양식의 작동과정에서 내재된 모순이 형상화된 하나의 파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포디즘 축적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국민경제 내에서 생산과 소비의 거시적 조응관계가 조절되는 방식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재생산과 축적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지만, 축적활동의 초국경화와 지구화는 재생산과 자본 축적의 조건이 더 이상 국민국가 내에서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의 해외 이전과 확산, 상품 및 금융시장의 개방, 이에 다른 대규모 해외자본의 유입 허용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민경제구조 내에서 생산부문과 유통순환부문간의 호순환에 제동이 걸리면서 거시경제의 탈구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탈구는 생산과 소비, 생산자본과 금융자본,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등 경제 체제 부문간 불일치를 심화시켜 경제, 사회, 정치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불안정 구조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위기의 조건은 바로 이러한 불안정 구조에서 배태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불안정 구조는 세계화와 개방화란 이름으로 정부가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에 경제운용의 기능을 이양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결과란 점에서 볼 때, 이는 국가조절양식의 이완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개관해 본 바와 같이 이 책이 담고 있는 논의와 내용은 이론적이고 매우 추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도 실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자들이 읽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함축성은 경제정책, 사회정책, 도시 및 지역계획 등 다양한 공공분야의 학도와 실무자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수많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스트포디즘, 탈조절화, 지구화가 규범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순응적 계획의 사조가 지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는 선택의 자유, 국민주권주의, 인간성 회복 등의 가치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의 승리자가 지배하는 비민주성, 다수의 패배자를 양산하여 한계집단화하는 비인간성, 빈곤과 분배정의가 악화되는 불평등성 등의 문제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가치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성, 합리성, 기술중심주의, 전문가 우월주의, 가치중립성, 효율성 등의 원칙에 투철한 묵시적으로 시장원리를 지원하는 계획사조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본의 이동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포스트포디즘의 축적체제가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자본축적의 충직한 수단임을 선언하는 이러한 계획사고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관계를 존속 시킴으로써 결국은 계급적 지배, 억압, 수탈의 구조를 영속화하여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과정적 정의, 환경적 정의, 오염규제의 신사고 등과 같은 용어들이 계획분야의 담론에서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사회적으로 성장연대의 발호가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달성될 수 없

는 이상에 불과하다.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조적 배제의 희생집단이 없어지는, 즉 포섭적 민주주의가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가능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집단 내부에 미시적 정치의 형상화와 시민사회의 집단간 연대를 통하여 소외집단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사회적 과두 지배구조의 극복, 시장체제의 잔인성으로부터 인간의 보호, 경제적 소외와 수탈의 사회구조 혁신 등과 같은 계획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바로 이러한 사회계획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책 분야의 학도와 실무자들에게 이 책의 내용은 사회계획의 구상과 실천행동 강령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무한정으로 제공해 주는 자원의 보고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조철주 cheoljcho@chongju.ac.kr

## 참고문헌

- 조철주, 1999, 『급변하는 계획환경에 따른 한국계획사고의 대응방안: 국가의 퇴조와 시장의 대두에 대응하는 신 계획사고의 모색』,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1권 제3호.
- Friedmann, J., 1998,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Planning: The Rise of Civil Society". In M. Douglass & J. Friedmann(eds.), *Cities for Citizens: Planning and the Rise of Civil Society in a Global Age*. New York.
- Jessop, B., 1999, *Globalization and The National State, published by the Department of Sociology, Lancaster University*(<http://www.lancaster.ac.uk/sociology/soc012rj.html>).
- Jessop, B., 1999, *Reflections on Globalization and its Illogics*, published by the Department of Sociology, Lancaster University(<http://www.lancaster.ac.uk/sociology/soc013rj.html>).
- Jones, M. R., 1997, "Spatial Selectivity of The State? The Regulationist

Enigma and Local Struggles Over Economic Governance.”  
*Environment and Planning A* 29.

Low, N., 1991, *Planning, Politics and The State: Political Foundations of Planning Thought*. London: Unwin Hyman.

Peck, J. A. & M. R. Jones, 1995, “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s: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or What?”. *Environment and Planning A* 27.

Rhodes, R. A. W.,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UK: Open University Press.

